

보도시점 25. 2. 11.(화) 11:30 배포 25. 2. 10.(월)

[2025년 재외동포청 주요업무 추진계획]**한민족 공동체의 총체적 역량 확대를 통한
더 큰 대한민국으로의 도약**

- 굳건한 재외동포정책 체계 확립
- 새시대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확대
- 따뜻한 동포 맞춤형 보호·지원
- 상생의 동포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
- 편리한 동포생활 구현

□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2.11(화) 오전 인천 송도에 위치한 재외동포 웰컴센터에서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이 청장은 이 자리에서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의 총체적 역량 확대를 통한 더 큰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올해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아울러, “K-컬처 등 한류가 지구촌에 확산되는 가운데, 세계 각지에서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정치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동포사회와 손잡고,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것이 동포청 설립의 취지이자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 이를 위해, 2025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핵심 5대 과제로서 △재외동포정책 강화체계 확립 △재외동포 정체성 강화 △국격에 걸맞은 동포 보호·지원 강화 △한인 네트워크 활성화 △편리한 동포생활을 제시했다.

[2025년 업무추진 방향]

목표

**한민족 공동체의 총체적 역량 확대에
기여하는 동포 정책**

| 5대 핵심 추진과제 | 중점 실천과제 |
|--|--|
| <p>1. 재외동포정책 강화체계 확립</p> | <p>①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② 범정부 협업 및 동포사회 의견수렴 활성화</p> |
| <p>2.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p> | <p>① 재외동포 교육 강화 ② 차세대동포 지원 사업 내실화</p> |
| <p>3. 국격에 걸맞은 동포 보호·지원 강화</p> | <p>① 재외동포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 ② 국내외 취약동포 지원 ③ 국내동포 지원을 위한 종합적·실질적 정책 추진 ④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p> |
| <p>4. 한인 네트워크 강화</p> | <p>① 지역별·분야별·세대별 한인 네트워크 강화 ② 동포 경제인 네트워크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 기여</p> |
| <p>5. 편리한 동포생활</p> | <p>① 원스톱·디지털 통합민원서비스 확대 ② 재외동포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③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강화</p> |

1.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재외동포정책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 우선, 국내 동포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내동포 정착지원 정책의 법적 기반을 확립하고,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명칭·기능을 조정하기 위해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 또한, 격년으로 제작하는 「2025 재외동포현황」을 발간하여, 향후 정책과 사업의 기반을 확립한다.
- 한편, 현지 동포사회와의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고, 지역별·분야별 동포 사회 현안 해결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 및 세미나도 활성화한다.

2. 동포사회 세대교체 추세에 맞춰 차세대동포 정체성 함양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 전 세계 1,400여 곳의 한글학교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온라인 교육 플랫폼 (스터디코리아) 기능 개선 및 콘텐츠 확대 등 재외동포 교육을 강화한다.
 - * 한글학교 운영 지원 예산 : ('23년) 141억원 → ('25년) 186억원 (+45억원, 32% ↑)
- 재외동포사회와 모국에 기여할 우수 인재 육성 차원에서,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연수를 확대*하고, 초청 장학사업의 사후관리 내실화 등 운영 체계를 개선한다.
 - * 재외동포 모국 초청연수 참가자 : ('24년) 2,100명 → ('25년) 2,600명 (+500명, 23% ↑)
- 아울러, 차세대 동포로 구성된 「글로벌 차세대동포 위원회」(가칭)을 신규로 구성하여,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을 논의하고, 세대교체에 따른 동포사회 변화에도 적극 부응한다.
- 재외동포 청년(만 20~34세)의 재외공관에서의 인턴십(6개월) 활동을 지원하여 국정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도 계속된다.

3. 대한민국 국격에 걸맞은 동포 보호·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재외동포분들이 거주국에서 주류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고, 지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복수국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적·병역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2025년 세계한인입양대회 개최와 「입양동포 민원 전담창구」 신설 등 입양동포 지원 활동을 강화한다.
- 국내외 취약동포에 대해서는 따뜻하게 보듬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사할린동포가 자녀와 이산가족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 「사할린동포법」에 따라 모든 자녀 및 그 배우자와 동반하여 영주 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또한, 사할린동포 대상 법률 지원 사업을 지속하고, 올해 최초로 실시하는 사할린동포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정착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더욱 안정적으로 국내 정착을 지원한다.
 - 2007년 이후 중단된 「무국적 고려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국적 고려인동포의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역사박물관 건립도 본격 추진한다.
 - 그 밖에도, △해외위난 동포사회 지원 확대 △베트남 귀환여성 한국국적 자녀 지원 △국내 피난 동포의 체류 지원 등과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세심하게 살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동포청 출범 후 처음으로 국내동포를 정책 대상으로 포함하고, 올해 국내동포 지원을 위한 종합적·실질적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청소년·성인·고령층 등 동포 맞춤형 적응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단체의 관련 활동도 지원해 나간다.
- 이와 동시에,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 등 시대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매월 「이달의 재외동포」를 선정하여 재외동포의 모국기여를 널리 알린다.

4. 재외동포 사회와 모국 대한민국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상생의 선순환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 2025년 세계한인회장대회(10월)를 개최하여 모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세계한인차세대대회(5월)를 개최하여 차세대동포 역량을 강화한다.
- 또한, △광복 80주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멕시코 한인 이주 120주년 및 아르헨티나·파라과이 한인 이주 60주년 등 역사적 기념사업 등 재외동포사회의 맞춤형 사업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합니다.
- 무엇보다, 동포 경제인 네트워크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 올해 4월 「2025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미국 애틀랜타에서 개최하여 국내 기업 및 동포 경제인의 비즈니스 수요에 부응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및 판로 다각화를 지원한다.
- 또한,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OK Biz)을 통한 국내 경제인과 재외동포 경제인을 연계하고, 온라인 플랫폼(「한상넷」)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자문 및 비즈니스 매칭 기회를 제공한다.
- 아울러, 재외동포 기업의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연구를 실시하는 등 한상기업의 국내투자 유치 촉진방안도 모색해 나간다.
- 더불어, 전 세계 동포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24시간 운영하는 「재외동포와의 소통 플랫폼」(가칭 '재외동포TV')을 구축·운영한다.

5. 올해에는 더 편리해진 재외동포 민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난해 11월 시범실시에 이어, 최근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 재외동포인증센터를 통해 한국 휴대전화 없는 재외국민도 비대면 신원확인 후, 전자정부 서비스뿐만 아니라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신원 확인은 해외에 계신 동포분들의 가장 큰 민원사항 중 하나로서, 인증센터 서비스 제공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 또한, 재외공관 방문이 어려운 재외국민에게 비대면 화상 영사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바일상에서 아포스티유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지난해 12월 개소한 재외동포 통합민원실 인천분소를 통해 동포청 민원 서비스를 인천공항에서도 제공받을 수 있다.

○ 아울러, 재외국민등록 제출 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재외국민 등록률 제고를 위한 홍보도 적극 전개한다.

□ **끝으로, 재외동포청은 2025년도 중점과제 추진을 통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① **(국내동포)** 국내에 거주·체류 중인 동포들은 우리 사회의 당연한 일원으로 자리 잡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사할린동포)** 사할린동포는 모든 자녀와 함께 영주귀국하여 이산의 아픔 없이 국내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다.

③ **(국내기업)**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와 동포 경제인 연계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과 판로 개척에 자신감을 갖고, 폭넓은 수출 기회를 얻는다.

④ **(해외거주 동포)** 한국 휴대전화기 없더라도 국내 전자정부, 금융, 교육, 쇼핑 등 각종 온라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⑤ **(모든동포)** 「재외동포와의 소통 플랫폼」(가칭 '재외동포TV')을 통해 24시간 대한민국의 소식과 재외동포 정책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국민의 삶에 대한 기대효과]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국내 동포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 연령별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정착 단계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수강
- 지역별 특성에 따라 체류지원, 생활역량 강화, 산업 및 생활안전, 사회 적응 등 지원
- 국내 소재 민간 단체의 국내동포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



사할린 동포

모든 자녀와 함께 모국으로 귀환할 수 있습니다.

- 2025년부터 사할린동포 직계비속 1명만이 아니라, 사할린동포의 모든 자녀가 영주귀국 지원 신청 가능
- 영주귀국하여 국내에 정착 중인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생활에 대한 실태조사 최초 시행되어 실효적 정책 수립에 반영



국내 기업

해외시장 진출과 판로 개척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 4월 미국 애틀랜타에서의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동포 경제인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수출계약의 계기
- 다양한 산업 분야의 '세계한인비즈니스포럼'에 참여하여 폭넓은 수출의 계기

2025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해외거주 동포

이제 한국 휴대전화 없이도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 휴대전화 없는 재외국민도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재외동포인증센터)으로 민간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 가능
- 발급받은 인증서로 전자정부, 금융, 의료, 쇼핑 등 각종 온라인 서비스를 휴대전화 본인확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



전 세계 어디에 있어도 언제든지, 모국 소식과 정책, K-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 2025년부터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재외동포와의 소통 플랫폼 (가칭 재외동포 TV)을 새로 개설하여 운영
- 재외동포TV에서 재외동포들의 일상 시간에 맞추어, 재외동포정책과 재외동포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



- 붙임 1.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 브리핑 사진(행사 후 배포). 끝.

| | | | | | |
|-------|------------------|-----|-----|-----|--------------|
| 담당 부서 | 재외동포청 기획재정담당관 | 책임자 | 과장 | 홍명화 | 032-585-3128 |
| | | 담당자 | 사무관 | 성준경 | 032-585-3296 |

한민족 공동체의 총체적 역량 확대를 위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5. 2.



재외동포청
Overseas Koreans Agency

순서

| | |
|----------------------------------|----|
| I. 정부 전반기 성과 및 평가 | 1 |
| II. 2025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 3 |
| III. 2025년 핵심 추진과제 | 5 |
| IV.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 16 |

1. 정부 전반기 성과 및 평가

1 주요 정책성과

□ 재외동포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 재외동포 업무 전담 기구인 '재외동포청' 신설('23.6.5)
- 「재외동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시행('23.11.10 시행), 범정부 종합계획인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년도 시행계획 수립
- 「사할린동포법(약칭)」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24.7), 「해외이주법」 시행령('24.12) 및 시행규칙('24.4) 등 개정
- 동포간담회(정상 주최 18회, 청장 주최 21회)를 포함한 국내·외 민생 현장 방문을 통해 동포사회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

□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강화

- 한글학교 운영 지원 확대, 교사역량 강화 지원, 「스터디코리아」 운영 개선
- 세계한인차세대대회, 모국 초청연수, 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 등 차세대동포 육성 사업 적극 추진

□ 국내외 취약동포에 대한 지원

-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고려인동포 한국이해과정 운영, 베트남 귀환여성 한국국적 자녀 현지 정착 지원사업 등 실시
- 미국 입양동포의 시민권 취득실태 파악 등 입양동포 지원 정책 본격화
- 역대 정부 최초 원폭 피해 동포 국내 초청('23.9), 파독 근로자 초청 행사('23.10) 등을 통해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
-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제정('24.2)

□ 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

- 두 차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23년 미국, '24년 전주)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내 기업 해외 진출 및 판로 확대 등을 실질 지원

| | '22년 대회(울산) | '23년 대회(미국 애너하임) | '24년 대회(전북) |
|------|-------------|------------------|-------------|
| 상담횟수 | 3,700건 | 17,183건 | 20,813건 |
| 상담금액 | 3억 6,000만불 | 5억 7,200만불 | 7억 9,200만불 |
| 현장계약 | N/A | 1,940만불 | 5,800만불 |

-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OK BIZ) 위촉('24.9), 두 차례 세계한인비즈니스 포럼 등을 통한 국내기업-동포경제인 간 상시 비즈니스 협력 체계 마련

□ 원스톱 통합민원서비스 플랫폼 구축

- 재외동포 통합민원실 신설('23.6.5) 및 인천공항 분소 개소('24.12.2),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개소('23.6.5)를 통해 통합민원서비스 제공
-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마련 통한 재외동포 온라인 서비스 편의 제고

2 개선 필요사항

□ 국내 귀환동포를 위한 체계적·종합적 정책 수립 필요

※ 국내 귀환동포 현황 : 2024년 기준 86.4만 명 / 지속 증가 추세

-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만큼, 재외동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통합적·체계적인 국내동포 지원 업무 수행 필요
 - 기존의 국내 체류 동포 정책은 여러 부처로 산재*, 국회·언론·동포들의 체계적인 정책 추진 요구 지속
 - * 법무부(외국인 정책), 행안부(외국인 주민정책),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 정책) 등
- 국내 귀환동포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인적자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우리 국민이 국내 귀환동포에 대한 긍정적·포용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인식제고 노력 역시 필요

□ 복수국적 제도 개선

-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대응, 글로벌 인재 유치, 모국과의 연대의식 제고 등을 위한 복수국적 제도 개선방안 모색 필요
 - 재외동포사회, 언론, 국회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 필요성 제기
-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한 복수국적 제도 개선 본격화와 동시에 국민공감대 확보 노력도 지속

II. 2025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

1 추진 여건

□ 재외동포사회 위상 제고

- 세계 각지 재외동포사회의 거주국 내 정치적·경제적 위상 제고
 - 실례로, 우리 동포 15명의 '24년 미국 연방·주의원 선거 당선, 고려인 2명의 우즈베키스탄 하원의원 당선 등 정치 영향력 증대
 - 초기 어려움을 딛고 세계 각지에서 성공한 동포 경제인들이 증가
- 동포사회 위상 변화에 따른 현지 맞춤형 동포 정책 수립 필요

□ 대외 불확실성 증대

-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이민정책 변화, 우크라이나·중동 정세의 불안 지속 등
 - 현지 동포사회에 대한 모국 정부의 관심과 지속 필요성 확대

□ 국내 저출생·고령화 심화 및 경제인구 감소

-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생*과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직면
 - * '23년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
 - ** 고령화지수 : ('10) 67.2 → ('15) 93.0 → ('20) 129.3 → ('23) 165.4
 - 이에 따라, '25년 이후 경제활동인구* 감소 전망 및 생산연령인구 감소 폭 확대**
 - * 경제활동인구(만명, 장래인구추계) : ('21) 2,831 → **(25) 2,912** → ('30) 2,876
 - ** 생산연령인구 증감(만명, 장래인구추계) : ('23) △17.1 → ('24) △24.4 → **(25) △41.6**
-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 대응 차원에서 복수국적 제도 개선, 국내 귀환 및 투자 희망 동포 유치 등 동포정책 필요

□ 국내 귀환동포 지속 증가

- 한국의 선진국 진입 및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인해 국내 체류 외국 국적동포 수는 '22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
 - *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 수(천명) : ('20) 811 → ('21) 779 → **(22) 805 → (23) 849 → (24) 864**
- 국내 체류 동포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조기에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 활용 필요

목표

한민족 공동체의 총체적 역량 확대에
기여하는 동포 정책

| 5대 핵심 추진과제 | 중점 실천과제 |
|---------------------------|--|
| 1. 재외동포정책 강화체계 확립 | ①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② 범정부 협업 및 동포사회 의견수렴 활성화 |
| 2.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 ① 재외동포 교육 강화 ② 차세대동포 지원 사업 내실화 |
| 3. 국격에 걸맞은 동포 보호·지원 강화 | ① 재외동포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 ② 국내외 취약동포 지원 ③ 국내동포 지원을 위한 종합적·실질적 정책 추진 ④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
| 4. 한인 네트워크 강화 | ① 지역별·분야별·세대별 한인 네트워크 강화 ② 동포 경제인 네트워크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 기여 |
| 5. 편리한 동포생활 | ① 원스톱·디지털 통합민원서비스 확대 ② 재외동포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③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강화 |

Ⅲ. 2025년 핵심 추진과제

① 재외동포정책 강화체계 확립

1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 「재외동포기본법」 개정 추진

- '국내 귀환동포 정착 지원 정책'을 주요 재외동포정책으로 규정
- 재외동포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자체의 책무 규정
-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관련 절차 등 체계 개선
- 재외동포협력센터 명칭 변경 및 수행 기능 조정
 - 센터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관의 명칭을 '동포교류진흥원'으로 변경 및 홍보사업 등 수행 범위 조정
- 재외동포단체 지원금 사후관리 근거 마련 등 추진

□ 범정부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 수립

- * (그간의 추진경과)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 수립('24.1.30.)
「2024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 수립('24.9.9.)

- 제1차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2025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 수립

2 범정부 협업 및 동포사회 의견수렴 활성화

□ 대통령·총리 해외 순방 등 주요 행사 계기 동포간담회 개최

- * △(대통령·총리) 해외 순방 계기 활용
△(재외동포청장) 재외동포청 주요 행사 계기 간담회 개최

□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운영 내실화

- 현행 분과위원회(4개)를 활성화하여 재외동포정책의 분야별 현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 발굴·대응
 - * △법·제도 분과위원회, △차세대동포·교육 분과위원회, △역사적특수동포 분과위원회, △동포서비스 분과위원회
- 분과위 회의 실적을 종합하여 장·차관급 상위 회의체(재외동포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와의 연계하여 정책 추진체계 내실화

□ 재외동포현황 통계 개선 및 내실화

- 거주국가별 재외동포현황인 「2025 재외동포현황」 조사 및 발간
- 관계부처(법무부·행안부·지자체 등) 협업을 통해 국내 거주 동포 관련 통계 마련

□ 동포사회 현안 해결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 활성화

- **(지역별 맞춤형 정책 연구)** 미주, 유럽, 대양주, 아주, 러시아·CIS 등 재외동포 거주 지역별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 추진
- **(분야별 정책 연구)** 동포사회의 세대교체, 국내 체류 동포 규모(귀화 동포 포함)의 증대 등 분야별 현안 대응 방안 연구
- **(학술 포럼 및 세미나)** 재외동포,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 등 참여 「2025년 재외동포정책 학술포럼」, 「학술세미나」 추진

2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1 재외동포 교육 강화

□ 한글학교 운영 지원 및 역량 강화

- **(한글학교 운영 지원)** 한글학교 운영 지원 및 내실화를 통해 참여 학생·교사 증가 등 차세대동포의 한글·역사·문화 교육 강화
 - 한글학교 운영 지원 예산 : '23년 141억원 → '25년 186억원(+45억원, 32% ↑)
- **(한글학교 교사 역량 강화)** 한글학교 교사 현지 연수, 학위 취득 및 교원 양성과정 이수 지원 등을 통해 교사 전문성 제고
 - 지역별·수준별 역량 차이를 고려, 맞춤형 교수법 등 제공
- **(온라인 교육)** 한글학교 온라인 교육 플랫폼(스터디코리안 웹사이트) 기능 개선 및 콘텐츠 확대 통한 편의성 향상
- **(교육 콘텐츠 다양화)** 지역·연령 등 학습자 특성 및 학습 목적에 맞춘 다양한 교육자료(온라인 콘텐츠·실물 교보재) 개발·보급

□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설치

- **(개요)** 재외동포의 교육·문화·연수 시설인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의 건립 추진

〈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계획(안) 〉

-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로 173
(서울대 시흥캠퍼스 M1 부지)
- 규 모 : 지상 5층, 지하 1층 / 연면적 7,063㎡
- 용 도 : 도서관, 문서고, 전시관, 강의실 등



- **(국민 이해 제고)** 전시관 운영 및 체험학습 공간 마련 등을 통해 우리 국민 대상 올바른 이주 역사 교육 제공 및 재외동포 이해도 제고
 - 재외동포 아카이브 자료 수집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추진

2 차세대동포 지원 사업 내실화

□ 차세대 재외동포 모국 초청연수 확대

※ 재외동포 청소년, 대학생을 국내로 초청하여 모국의 역사·문화 체험 기회 제공

- 초청연수 규모 확대 및 지방정부 협업 통한 사업 내실화 추진
 - 초청연수 규모 확대 : (참가자) '24년 2,100명 → '25년 2,600명
(횟 수) '24년 8회 → '25년 10회 이상
 - 지자체와 협력 매칭펀드 구성, 예산 절감 및 지역 활성화 기여

□ 초청 장학사업 추진 및 체계 개선

- **(2025년 장학사업 추진)** 재외동포사회 및 모국에 기여할 우수 인재 100명 신규 선발 후 학위 취득 지원
- **(사업 체계 개선)** 재학생간 교류 활성화, 국내·외 거주 졸업생 교류, 인재 DB 구축 등 사후관리 및 네트워크 활동 추진

□ 「글로벌 차세대동포 위원회」(가칭) 구성

- **(개요)** 세대교체 등 동포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 수립을 위해, 다양한 지역·분야를 대표하는 차세대동포로 구성된 위원회(가칭) 신규 구성
- **(아젠다)** 차세대 리더, 입양동포단체 대표, 관련 전문가 등과 재외동포 정책 제안 아젠다 선정 및 위원회(가칭) 구성 등 운영 방안 등 논의

□ 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

- 재외동포의 국정참여 기회 부여를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 추진
- 만 20~34세 재외동포 청년의 재외공관별 인턴십(6개월) 활동

3 국격에 걸맞은 동포 보호·지원 강화

1 재외동포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

□ 거주국 현지사정에 맞춘 권익 신장 지원

- 미국 이민정책 변화에 따른 동포사회 영향 검토 및 지원
- 무국적 고려인동포의 합법적 체류자격 지원 방안 마련

□ 시대 변화에 따른 복수국적 제도 개선 추진(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

- 관계부처(법무부, 국회 등)와 협업을 통한 복수국적제도 개선방안 모색
*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의 영향 분석」 연구용역 시행('24.7~11월)
- 복수국적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

□ 복수국적 제도 이해 제고

-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복수국적 등 국적제도 홍보 강화
 - 재외동포 거주국에 직접 '찾아가는 통합민원 서비스' 계기 국적·병역제도에 대한 설명 및 상담 실시
 - 재외공관을 통한 국적·병역제도 홍보 실시
(제도 설명자료 배포, 영사 교육, 순회영사 활동 시 홍보 독려 등)

□ 해외입양동포 네트워크 구축 및 권익신장

- '2025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 개최'를 통해 모국 초청·교류 실시
- 입양동포 민원 전담창구를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내에 신설
- 입양동포 단체 간담회, 관계기관 업무협의 등을 통해 정책 수요자 중심의 입양동포 지원정책 및 방안 마련
- 정부가 해외 입양단체를 지원하여, 입양동포 지원 활동 강화

2 국내외 취약동포에 대한 지원

□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 사할린동포법 개정(동반가족의 범위 확대*)에 따른 사할린동포 영주 귀국 사업의 안정적 수행
 - * (기존)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만 → (개선) 모든 자녀와 그 배우자 동반 영주귀국 가능
- 사할린동포의 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법률지원사업 등 지속 확대
-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생활여건 실태조사 최초 시행

□ 고려인동포 권익신장 지원 다변화

- 무국적 고려인 실태조사 실시('07년 이후, 장기간 미수행)
 - 현지 고려인동포의 사정에 맞춘 지원 정책 실시
- 한 - 우즈벡 양국 정상간 합의('21.12, '24.6)에 따른 우즈베키스탄 내 고려인 역사박물관 건립 추진('25년, 설계 사업 우선 추진)

□ 베트남 귀환여성 한국 국적 자녀 지원

- * 이혼, 별거 등의 사유로 베트남인 어머니를 따라 베트남으로 동반 귀국한 한국국적 자녀의 현지 적응 및 정착 문제 지원

□ 해외위난 동포사회 지원

- 예산 확대('24년도 4천만원 → '25년도 1억원)에 따른 해외위난 지원 확대
- 해외위난 동포사회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지침 개정 등)

□ 국내 체류 취약동포 지원

- 피란동포(예: 러-우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고려인 등) 등의 국내 체류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법무부 등), 지자체 등과 협업

3 국내동포 지원을 위한 종합적·실질적 정책 추진

□ 동포 맞춤형 적응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청소년·성인·고령층 등 교육 대상에 따라 세분화된 적응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프로그램 예시 〉

- (청소년 대상) 한국어 교육, 한국 역사 교육, 정체성 함양 및 모국에 대한 자긍심 고취, 공교육 적응 및 학업집중 프로그램, 진로 탐색, 멘토링 프로그램 등
- (성인 대상) 생활 교육(임대차 계약, 금융 교육, 세금 납부 등), 자격증 취득 및 취업 준비, 노동자 권리 및 산업안전 교육 등
- (노년층 대상) 한국사회의 발전과 변화, 노년 인생 설계 컨설팅 등

□ 지역별·지자체별 국내 동포 정착지원 사업 추진

- 지자체와 협력하여, 동포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사업 수행
- 국내에 소재한 동포 관련 민간단체 활동 지원

□ 국내 체류 동포 실태조사 실시

- 이주 배경, 한국어 구사 정도, 한국생활 만족도, 근로 현황, 타부처 및 지자체 지원사항 등 실태조사('24.12~)

□ 관계부처·국회·지자체·학계·동포단체 등 유관기관 협업 네트워크 구축

- 현장 방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한 국내 동포 지원 정책 방향 정립
- 우리 국민의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긍정적·포용적 인식 확산 노력 지속

□ 국내동포 출입국·체류 편의 제공

-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및 '영사민원24'(온라인창구) 등을 활용

4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 재외동포 관련 내용 국내 교과서 수록

- 국정 교과목(초등 도덕)에 재외동포 관련 내용 수록 추진(교육부 협업)

□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실시

- 현행 초·중·고·대학생 대상 이해교육뿐만 아니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업 개편 추진

□ 재외동포와의 소통 플랫폼 구축

- 재외동포를 주제로 24시간 운영 방송 인프라 구축·운영 최초 실시 (가칭 ‘재외동포TV’)
- 동 플랫폼에서 동포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각 동포사회 역사·현황·모국기여 사례 등)를 제작, 송출

□ 「이달의 재외동포」 선정·발표

- 재외동포 개인 또는 단체의 모국 기여 사례를 발굴하고, 매월 “이달의 재외동포”를 선정하여 언론, SNS 등을 통해 홍보 추진

4 한인 네트워크 강화

1 지역별·분야별·세대별 한인 네트워크 강화

□ 재외동포 교류·협력 강화

- 2025년 세계한인회장대회 개최(10월) 및 내실화
 - 대표성 있는 동포단체가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참석 정부 부처 확대 등 정부와의 대화를 강화하여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 및 정책 환류
- 재외동포 문학상 권위 제고
 - 부문 개편, 시상금 증액, 연계 초청행사 개최 등을 통한 문학상 공모전 내실화 및 위상 강화

□ 재외동포사회 맞춤형 사업 지원 내실화 및 관리 체계화

- 정부 동포정책에 부합하는 재외동포 교류협력강화 사업 지원
- 광복 80주년, 지역별 이주 역사 기념 등 계기성 사업 지원 확대
 -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멕시코 한인 이주 120주년 및 아르헨티나·파라과이 한인 이주 60주년 기념 사업 지원
- 동포사회 역량 강화 및 세대교체 대비, 신·구세대간 협업사업 지원 확대

< 동포사회 협업 사업(예시) >

| | |
|--|---|
| ① 차세대 리더십 아카데미 “Leadership Bridge” | 세대간 소통증진, 동포사회 유명인사 등과 접촉, 사회활동 및 경력개발에 대한 네트워크 멘토링 프로그램 |
| ② 교육 아카데미 “Power up Korea” | 한국의 우수성,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 국가안보, 국제사회 속 선진한국 등 교육 * 유명인사 강연회, 포럼(통일, 북한 인권 등), 워크숍(역사관 확립 등) 등 |
| ③ 경제 아카데미 “Smart Business” | 창업 및 스타트업 멘토링, 비즈니스워크숍, 경영, 재테크 등 경제적 성공을 위한 워크숍 |

□ 차세대동포 역량 강화

- 2025 세계한인차세대대회 개최(5월)
- 지역별 핵심 차세대동포 단체 발굴 및 지역 거점 네트워크 활성화
- 차세대단체 주도 지역별 차세대대회 개최 지원 등 추진

2 동포 경제인 네트워크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 기여

□ 2025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해외 현지 개최(4월, 미국 애틀랜타)

- 국내·외 순환 개최를 통한 국내 기업의 판로 다각화
- 국내 기업 및 동포 경제인 수요에 부응한 비즈니스 프로그램 발굴
 - ※ 스타트업 경연대회, 벤처캐피탈 투자포럼, 미국 조달진출 세미나 등

□ 상시 비즈니스 사업 내실화

- 우수 동포 경제인으로 구성된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OK Biz)」을 통한 국내·외 경제인 연계 및 비즈니스 매칭 지원
- 온라인 플랫폼(‘한상넷’)을 통한 국내 중소기업 대상 상시 해외 진출 자문 서비스 및 비즈니스 매칭 기회 제공

□ 한상기업의 국내투자 유치 촉진방안 마련

- 우수 재외동포 기업의 모국 투자 촉진 통한 국내 경제 활성화 및 모국과 동포사회 교류 협력 강화
 - 2025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계기 지자체 투자 설명회 개최
- 재외동포 기업의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연구 실시 ('25년 상반기 완료 예정)

□ 국내 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 △(개요) 만 34세 이하 국내 청년에게 해외 동포기업 인턴십(6개월 이내) 제공
△(규모) '25년도 총 39명(동포청 30명, 지자체 9명)

- '25년도 근무 인턴 선발(상반기 21명, 하반기 9명) 및 사업 진행
- 지자체와의 매칭 사업을 통한 '25년 선발 인턴 규모 확대(+9명)
- 참여 동포 기업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안내·홍보

5 편리한 동포생활

1 원스톱·디지털 통합민원서비스 확대

- ① (대면민원) '재외동포 통합민원실(서울·인천분소)'에서 다부처 민원서비스 통합 제공
- ② (전화민원)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에서 365일 24시간 5개 국어 서비스 제공
- ③ (온라인민원)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구 영사민원24)' 웹사이트 운영

□ ‘재외동포 통합민원실’ 홍보 및 이용 편의 강화

- 통합민원실 위치 안내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홍보
- 인천분소의 인천공항 이전을 통한 민원편의 극대화

□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민원응대 품질 개선

- 민원응대 일원화를 위한 업무편람(‘24.4)을 활용한 교육 강화
- 해외체류 동포 대상 인지도 및 이용률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

□ ‘찾아가는 통합민원서비스’ 제공

- 재외공관 수요조사 토대로 재외동포 거주국 대상 화상 또는 대면상담회 정기 실시(화상 8회, 대면 4회 목표)

□ 재외동포 거주국 현지 제도 안내 및 상담 서비스

- 한인 사회 내 현지 전문가 협회와 협업하여 정기 상담 서비스 지원
- 재외공관에 현지 노무관리 안내서 배포(고용노동부, 재외공관 협업)

2 재외동포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 ① (재외동포인증센터) 한국 휴대전화 없는 재외국민도 비대면 신원확인 후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
- ② (디지털 민원서비스) 비대면 화상 영사서비스, 아포스티유 시스템 성능 개선 등을 통해 디지털 민원서비스 이용 기반 확대

□ 재외국민 온라인 신원확인 체계 구축 및 확충

- (재외동포인증센터) 인증서 발급 서비스 정식 개시(‘25.1.1), 인증서 발급 종수 확대 추진(‘24년도 5개 → ‘25년도 11개, 120% ↑)
-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신원확인증 발급 가능 공관 확대(‘24년도 21개 → ‘25년도 34개, 62% ↑)

□ 디지털 민원서비스 이용을 위한 기반 확대

- **(비대면 화상 영사서비스)** 재외공관 방문이 어려운 재외국민의 민원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 화상 영사서비스 도입
- **(아포스티유 시스템 재구축)** 기존 아포스티유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의 편리한 아포스티유 민원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개선
- **(디지털 금융위임장)** 기존 종이 문서로 작성한 금융위임장을 디지털로 전환하여 편의성 제고 및 정보 신뢰성 증대

3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강화

□ 재외선거 제도 개선

- 동포간담회, 「세계한인회장대회」 등 계기, 동포사회 의견 수렴
- 재외국민 투표편의 및 신뢰성 강화를 방향으로 제도 개선

□ 재외국민등록 제도 개선

- 제출 필요 서류 간소화를 위한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및 이에 따른 등록률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IV.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국내동포)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 연령별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정착 단계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따라 체류지원, 생활역량 강화, 산업 및 생활안전, 사회 적응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 소재 민간 단체의 국내동포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됩니다.

(사할린동포) “모든 자녀와 함께 모국으로 귀환할 수 있습니다.”

- 2025년부터 사할린동포 직계비속 1명만이 아니라, 사할린동포의 모든 자녀가 영주귀국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영주귀국하여 국내에 정착 중인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생활에 대한 실태조사가 2025년에 최초 시행되어 향후 실효적 정책 수립에 반영됩니다.

(국내 기업) “해외시장 진출과 판로 개척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 미국 애틀랜타에서 개최될 한인비즈니스대회를 통해 동포 경제인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수출계약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 다양한 산업 분야의 ‘세계한인비즈니스포럼’에 참여하여 폭넓은 수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게 됩니다.

(해외거주 동포) “이제 한국 휴대전화 없어도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 휴대전화 없는 재외국민도 재외공관 방문없이 전자여권과 해외 체류 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재외동포인증센터)으로 민간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 발급받은 인증서를 통해 국내 전자정부 서비스, 금융, 의료, 교육, 쇼핑 등 각종 온라인 서비스를 휴대전화 본인확인 없이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동포) “전 세계 어디에 있어도, 언제든지, 모국 소식과 정책, K-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 2025년부터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재외동포와의 소통 플랫폼(가칭 ‘재외동포TV’)을 새로 개설하여 운영합니다.
- 재외동포TV에서 재외동포들의 일상 시간에 맞추어, 정부의 재외동포정책과 재외동포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행사 후 배포